

코로나 19 대응

주요국의 금융정책 현황 분석

(개인과정)

2022년 7월

금 융 위 원 회

(오 태 석)

〈차 례〉

□ 국외교육 개요	3
□ 교육기관 개요	4
□ 교육결과보고서 요약서	5
I. 서론	7
1. 연구배경 및 목적	7
2. 연구범위 및 방법	8
II. 미국의 코로나 19 대응 금융정책	10
1. 경제 동향	10
1) 실물경제	10
2) 금융시장	13
2. 재정정책	15
1) 1차 재정지원 정책	15
2) 2차 재정지원 정책	16
3) 3차 재정지원 정책	17
4) 4차 재정지원 정책	21
5) 5차 재정지원 정책	22
3. 통화정책	25
1) 금융완화 정책	25
2) 금융시장 지원	29
3) 은행 대출 지원	33
4) 기업 지원	35
5) 가계 및 소비자 지원	38
6) 지방정부 차입 지원	39

Ⅲ. 한국의 정책 대응 및 시사점	41
1.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 금융정책	41
1) 재정정책	42
2) 통화정책	46
2.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 정책 특징	51
3. 향후 과제	53
□ 참고문헌	54

국외교육 개요

1. 파견국가 : 미국
2. 교육기관명 : 미국 미주리주 경제개발부
(Missouri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3. 교육분야 : 금융
4. 교육기간 : 2021. 12. 29. ~ 2022. 6. 26.

교육기관 개요

명 칭	미국 미주리 주정부 경제개발부 (Missouri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소재지	Jefferson City, Missouri, U.S.A.	
홈페이지	https://ded.mo.gov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미주리주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고용 확대 및 스타트업 육성 등,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1984년 9월 설립 ■ 비즈니스 지원, 직업 교육, 투자 유치, 지역 경제와 문화활동의 지원, 주요 경제 보고서 발간, 경제 관련 프로그램 수행 등 미주리주의 경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dministration, Regional Engagement, Business & Community Solutions, Strategy & Performance, Tourism 등 11개 부서로 구성 	
주요인사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ggie Kost ■ Acting Director 	
교섭창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ascha Lord ■ Acting Manager Director, Missouri International Trade & Investment Office 	
	전화	(573) 522 - 6524
	E-mail	Natascha.Lord@ded.mo.gov

국외결과보고서 요약서

성 명	오 태 석	직 급	6급
소 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파견국가	미국	교육기간	2021. 12. 29. ~ 2022. 6. 26.
교육기관	미주리주 경제개발국	교육구분	단기
교육목적	직무향상	보고서매수	55매
내용요약	<p>□ 미국의 코로나 19 대응 금융 정책</p> <p style="margin-left: 20px;">○ 재정정책</p> <p>코로나 19로 인한 유례없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미 정부와 의회는 총 5차례의 대규모 재정지원 정책 시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차 재정지원 정책(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2) 2차 재정지원 정책(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3) 3차 재정지원 정책(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4) 4차 재정지원 정책(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5) 5차 재정지원 정책(American Rescue Plan Act) <p style="margin-left: 20px;">○ 통화정책</p> <p>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미연방 준비제도의 경기부양책은 금융완화 정책, 금융시장 지원 등 여섯 가지 기본 범주로 분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완화 정책: 기준금리 인하, 양적 완화 정책 2) 금융시장 지원: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머니마켓 뮤추얼펀드 시장 지원, 환매조건부채권 운영범위 확대, FIMA Repo Facility 신설, 통화 스와프 계약 확대 3) 은행 대출 지원: 은행에 대한 직접 대출, 일시적 규제 완화 		

- 4) 기업지원: 대규모 고용 기업에 대한 직접 대출, 기업어음 매입기구, 중소기업 대출 지원, 비영리단체 대출 지원
- 5) 가계 및 소비자 지원: 자산유동화증권 시장 지원기구
- 6) 지방정부 차입 지원: 지방정부에 대한 직접 대출

□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 금융 정책

○ 재정정책

- 1) 2020년 총 8차례의 대통령주재 비상경제회의 개최를 통한 범정부적 비상경제 조치들 추진
- 2) 2021년까지 총 6차례의 대규모 추경안 마련, 집행

○ 통화정책

- 1) 기준금리 인하: 1.25% → 0.50%
- 2)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및 계약 연장: 달러 유동성 확보
- 3)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 전액 공급방식의 RP 매입 제도
- 4)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 신설: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 5) 회사채·CP 매입기구에 대한 대출: 저신용 기업 지원

□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 정책 특징

- GDP 대비 낮은 코로나 19 대응 재정지출 수준, 현금 지급 등의 직접지원보다는 대출이나 유동성 공급 등의 금융지원에 집중

□ 향후 과제

- 확장적 재정 시대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 필요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코로나 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전 세계로 급격하게 확산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2020년 3월 유럽과 미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WHO는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을 공식 선언하게 되었다.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세계 각국은 국경 봉쇄정책, 백신 개발 및 접종 권고, 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2022년 현재까지 코로나 19의 신규 변이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등장과 이로 인한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전 세계적인 사회·경제적 피해도 지속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19 확산 초기부터 국내뿐 아니라 미국·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함에 따라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됐고, 이러한 수요 감소는 기업 구조조정의 확산과 그에 따른 노동자의 급여 삭감 및 해고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노동자의 소득감소는 또다시 소비자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기침체 상황과 더불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함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지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코로나 19 팬데믹의 종료가 요원한 상태에서 기업들은 적극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세계 각국의 봉쇄정책에 따라 해외 직·간접 투자도 연기하는 등,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OECD 36개 회원국의 경제 성장률은 모두 마이너스

를 기록했으며, OECD 회원국의 평균 GDP 성장률은 -5.48%로 조사되었다. 주요 선진국인 G7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이 -3%대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뒤이어 일본, 캐나다, 독일이 -5%대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과 같은 주요 유럽 국가들은 -10%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코로나 19 확산 및 지속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이제까지 미국이 시행해온 재정 및 통화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정책별 특징과 정책역량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주제인 「코로나 19 대응 미국의 금융정책 현황 분석」은 미국의 코로나 19 대응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연구의 명확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는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의 경제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과 코로나 19 대응 정책 규모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의 코로나 19 대응 정책에 대한 비교를 통해 무용한 분석 절차를 방지하고 시사점 도출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세계 경제 침체 사례에서 보듯이 향후의 경제위기는 과거 금융 분야에서 시작된 금융시장 충격과 다르게 전염병, 기후변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실물 분야에서 시작되어 급격한 속도로 전 세계로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존 주류 전통 경제학적 분석방법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 방안 보다는 실제로 시행되었던 사례 위주의 분석을 통해, 보다 실물경제에 현실 적합성이 높은 경제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미국의 코로나 19 대응 정책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한국의 경제 상황 변화와 한국 정부 및 통화 당국의 재정, 통화 정책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적 맥락에 적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볼 것이다.

II. 미국의 코로나 19 대응 금융정책

1. 코로나 19 확산 이후 경제 동향

2020년 1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CDC) 미국 내 코로나 19 첫 감염사례를 확인한 이후, 같은 해 4월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고, 11월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코로나 19 확산세를 보여주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미국 정부는 2020년 12월부터 화이자, 모더나에서 개발한 코로나 19 백신을 민간인에게 접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백신 접종은 예상보다 더뎠고 신규 일일 확진자가 20만 명 이상으로 급증하는 등 확산세는 계속 빨라졌다.

이후 주춤하던 코로나 19 확산세는 2022년 오미크론 등 코로나 19 변이의 확산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누적 확진자 수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미국 내 코로나 19 확산은 지속되고 있다.

1) 실물경제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본격적인 확산 이전인 2019년 2.3%의 실질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던 미국 경제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했던 2020년 -3.4%의 실질 GDP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팬데믹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역(逆)성장을 보여주었다.

이는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시 기록한 실질 GDP 성장률인 -2.6%보다 더 낮은 수치로서, 기존의 금융 분야에서 시작된 경기침체와는 다르게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소비, 투자 등의

위축으로 인한 실물충격에 따른 경기침체라는 특성을 갖는다.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2020년 1분기 -5.1%, 2분기 -31.2%를 기록하여 유례없는 경기침체를 겪었다. 이는 GDP의 최대 구성 항목인 개인소비지출의 급감,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기업의 투자 감소, 세계 각국의 봉쇄정책에 따른 수출 감소 등으로 발생한 현상이다.

하지만 2020년 3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정책이 시행되고 경기침체에 따른 반등 효과, 코로나 19 백신 접종의 확대, 경제주체의 기대 심리 안정 등의 이유로 다시 실질 GDP 증가율이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

또 다른 실물경제 지표인 실업률을 살펴보면, 코로나 19 확산 전 3%대를 유지하던 미국의 실업률은 2020년 4월 14%, 5월 13%, 6월 10%를 넘는 등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급격한 실업률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19 확산세가 심했던 2020년 4월, 농축산업을 제외한 비농업 일자리 수가 한 달 만에 2,000만 개 이상 감소하는 등 미국 고용시장의 상황은 유례없이 급격히 위축되었고, 이에 따라 실업자의 급증, 민간소비의 감소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하지만 2020년 하반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정책이 시행되고 민간의 향후 기대 심리와 소비자 신뢰지수 등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실업률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코로나 19 확산 이전의 수치인 3%대를 회복하였다.

이러한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확장적 경기 부양정책에 따라, 미국의 2020년 상반기 재정수지는 2,300조 달러 적자를 돌파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19년 79.2%에서 2020년 98.2%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바이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살펴볼 때, 향후 대규모의 국채발행 및 정부 부채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미국 내 주택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건축허가 건수, 신규주택 착공 호수, 신규 주택판매 증감 추이 등의 지표는 2020년 상반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주택시장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침체를 겪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물가수준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 기준 0% 대의 상승률을 나타내었다.

이 외에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전 세계적인 소비 및 투자의 감소, 세계 각국의 봉쇄정책에 따른 무역량의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실물경제는 2020년 이후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급격한 경기침체를 겪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실물경제의 일부 지표들이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 이전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겪으며 급격한 물가 상승과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대책으로서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해, 여전히 향후 경기침체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 금융시장

코로나 19로 인한 실물경제의 부정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의 증대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20년 3월 제로금리 수준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였다. 이 외에도 제한 없는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팬데믹 기간에 시중의 유동성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자산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으로 인해 시장금리는 급락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019년 12월 1.9% 수준에서 2020년 7월 0.53%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2년물 국채 수익률은 2019년 12월 1.57% 수준에서 2020년 7월 0.1%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22년 3월부터 연방준비제도는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최저수준을 유지하던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하기 시작했다. 2022년 3월 물가상승률은 지난 40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시장의 과도한 유동성 증가 등으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면서 미국 국채의 금리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치가 하락하면서 채권의 가치 또한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2022년 6월 기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수익률이 3%를 넘었으며 2년물 국채 수익률 또한 3%에 근접한 상황이다.

전 세계 자산시장의 기준 지표가 되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것은 저금리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급격한 금리상승은 향후 각종 자산시장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주요 주식시장은 2020년 코로나 19 사태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코로나 19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초,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 및 차입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하락 예상에 따른 대규모 청산 등에 따라 다우존스, 나스닥 종합지수는 급락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 정책이 발표되고 연방준비 위원회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으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주식 투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급락한 주식시장은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한 민간 투자자들의 주요 투자처가 되었고,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각종 주가지수는 최고치를 경신하며 미국 주식시장이 거품의 영역에 들어갔다는 경고가 지속되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는 연방준비은행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및 2022년 하반기 미국의 경기둔화 예상에 따라 이러한 주식시장의 거품이 붕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재정정책

코로나 19로 인한 유례없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미 정부와 의회는 총 5차례의 대규모 재정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그중 1~3차 재정 지원은 대통령 선포일 기준으로 2020년 3월에, 4차 재정 지원은 2020년 12월에 결정되었다.

2021년 신임 대통령으로 선출된 바이든은 5차 재정 지원을 2021년 3월에 서명하였다. 각 재정 지원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하 내용과 같다.

1) 1차 재정지원 정책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최초의 재정지원 정책인 1차 재정지원 정책 (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은 총 83억 달러 규모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3월 6일 해당 재정지원 법안에 대해 서명했다. 이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25억 달러의 3배 이상의 규모로서, 미 의회에서도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사태의 심각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백신과 기타 의료 물품의 개발과 생산 및 확보, 주(州) 및 지방 공공의료기관 보조금 지원, 피해 소상공인 대출,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국가에 대한 인도적 원조 및 의료시스템 지원 등 1차 재정지원 정책은 코로나 19의 급격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총 83억 달러 가운데 약 80% 수준인 67억 달러는 미국 내 대응조치를 위해 배정되었으며, 나머지 20%는 대외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처 및 국제질병 긴급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 등에 지급되어 국제적 대응조치를 위해 사용되었다.

그 이후 미국 내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재난관리청 보유의 500억 달러 규모의 기금 지원을 결정했다. 코로나 19 진단능력 확충 및 신속 진단 체계 마련, 국가전략 비축유의 최대 확보, 학자금 대출의 이자 유예, 확진자 치료 및 의료자원 확보를 위한 유예 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지원정책 주요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3월 6일 총 83억 달러 규모의 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에 서명하였다. 지원 자금은 다음 사업에 배정되었다.

- 백신 연구 기금
-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한 주(州) 정부, 지방정부 지원
- 해외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자금 배정

2) 2차 재정지원 정책

1차 재정지원이 결정되고 약 2주 후인 3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회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00억 달러 규모의 2차 재정지원법안(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에 서명하였다.

이 재정지원 결정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유급 휴가 및 유급 병가 지원, 중소기업의 유급휴가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유급 자녀 돌봄 휴가 혜택 제공, 실업보험 및 사회 취약 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식료품 지원, 코로나 19 무료검사에 대한 지원 확대, 저소득층 공공의료보험 기금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지원정책 주요내용

총 1,000억 달러 규모의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폐쇄 확산에 따라 무상급식에 의존하는 가정 지원
- 직원 수가 500명 미만인 회사는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용주가 이러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세금 공제를 제공
- 주(州) 정부를 위한 추가 실업 보험금 10억 달러 및 실업보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제공
- 모든 사람이 무료로 코로나 19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 및 비용 면제

3) 3차 재정지원 정책

이러한 2차 재정지원이 결정되고 약 1주 후인 3월 27일, 사상 최대 규모인 총 2조 2,000억 달러 규모(GDP의 약 11%)의 3차 재정지원 법안(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이 통과되었다.

이 재정지원 결정은 가계 및 근로자를 위한 개인별 현금 지급 및 실업수당 혜택 확대,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대출과 기보유 대출상환 및 긴급 운영자금 지원, 항공업 등 피해 기업에 대한 신규대출 및 투자 지원, 피해 기업 임금 및 복지후생비 지급 보조, 보건의료 시스템 지원, 재난구호기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렇게 2020년 3월 총 3차례의 대규모 재정지원 정책이 결정된 이후, 4월에 3차 재정지원 법안을 보완하기 위해 총 4,840억 달러의 3차 재정지원 보완 정책 법안(Paycheck Protection Program Healthcare

Enhancement Act)이 통과되었다. 이 재정지원 결정은 중소기업 급여보호 프로그램 재원 확충, 병원 및 코로나 19 검사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차 재정지원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 부문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고, 2차 재정지원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3차 재정지원은 부정적 실물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적 성격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지원정책 주요내용

2020년 3월 27일 세 번째이자 가장 큰 규모의 구제안이 법안으로 통과되었다. 미국 역사상 단일 구호물자로는 최대 규모다.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라고 불리며 CARES 3단계라는 별명을 가진 이 법은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 2조 2,000억 달러를 지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인당 1,200달러, 자녀당 500달러의 일회성 직접 현금 지급
- 2020년 12월 31일까지 실직자, 임시 근로자, 프리랜서를 포함하도록 실업급여 확대
- 2020년 7월 31일까지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 보조금 지급
- 180일 동안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모기지 대출에 대한 유예 및 압류 유예
- 코로나 19 영향을 받은 기업에 대한 정부 대출 5천억 달러 지원
- 급여 보호 프로그램 및 경제피해 재난대출 프로그램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 및 보조금 3,670억 달러 지원
- 병원 및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1,300억 달러 이상 지원
- 주 정부 및 지방정부에 1,500억 달러 지원
- 학교와 대학을 위한 400억 달러 지원

□ 3차 재정지원 보완 정책

2020년 4월 24일 3.5단계라는 별명이 붙은 추가 경기부양책이 법안으로 통과되었다. 주로 급여 보호 프로그램과 경제피해 재난대출 프로그램을 보충하기 위해 4,840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병원과 코로나 19 검사 확대를 위한 추가 자금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청 대출 및 근로자 유지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보증
-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및 대출 제공
- 코로나 19 바이러스 검사 확대
- 병원 지원

이러한 3차에 걸친 대규모 재정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재정지원 정책이 코로나 19로 인한 대규모 경기침체의 충격을 온전히 상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어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민간의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비관론적 예측이 확대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며, 세계 각국이 방역을 이유로 봉쇄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경제가 지원정책으로 단시간 내에 정상화 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2020년 8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적인 코로나 19 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네 가지 행정 조치에 서명했다. 대부분 이전 법률에서 제공한 코로나 19 구제안의 만료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 조치

- 추가 실업수당 지급

첫 번째 조치로서 LWA(Lost Ways Assistance)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주당 100달러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당 4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연방정부가 300달러를, 주(州) 정부가 100달러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재해 구호 기금에서 총 440억 달러가 사용되었다.

○ 학자금 대출 상환 경감

두 번째 행정 조치는 정부가 보유한 학자금 대출에 대한 지급유예와 이자 발생 기간을 2020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급유예는 2020년 9월 30일에 만료되도록 설정되었다.

○ 퇴거 및 압류 방지 정책

세 번째 행정 조치는 재무부와 주택도시개발부에 주택 소유자와 임대인에게 일시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것이었다. 이 조치의 주요 내용은 주택도시개발부가 임대인과 집주인이 퇴거나 압류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다.

○ 조세정책

네 번째 행정 조치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만 달러 미만의 급여세를 연기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연기된 세금은 2021년에 갚도록 예정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규모 재정지원 정책과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가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연방준비제도 또한 일관된 통화 완화 정책에도 경기회복의 한계를 확인함에 따라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4) 4차 재정지원 정책

2020년 12월 21일, 미 의회는 총 9,000억 달러 규모의 4차 재정지원 법안(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을 통과시켰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2월 27일 이 법안에 최종 서명했지만, 의회에 직접 경기 부양 지급액을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원정책은 실업수당 및 재난지원금의 확충, 백신 개발 및 배포 등 보건 지원, 긴급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지원정책 주요내용

- 16세 이하의 부양 청소년을 포함하여 개인당 600달러의 직불금 지급, 지급액은 연간 75,000달러까지 개인에게 직접 지급될 예정
- 2020년 12월 27일부터 11주간의 확대 실업급여 지급 시작, 자영업자와 계약직 근로자를 위한 팬데믹 실업 지원 프로그램의 확장, 실업 지원금을 전부 수령한 사람들을 위한 팬데믹 긴급 실업 보상 확대, 해당 프로그램들은 2021년 9월 5일에 만료
-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3,250억 달러 지원, 구체적으로 2,840억 달러의 급여보호 프로그램 대출, 200억 달러의 저소득 지역 사업자를 위한 경제피해 재난대출 보조금 등
- 543억 달러의 긴급구호기금과 227억 달러의 고등교육 긴급구호기금을 포함한 총 820억 달러의 교육기금 지원
- 250억 달러의 긴급 임대료 지원
- 보충 영양 보조 프로그램 혜택 및 푸드 뱅크 펀딩 15% 증가 등 260억 달러 규모의 영양 펀딩
- 교통자금에 총 450달러의 투자, 구체적으로 150억 달러의 항공사 급여 지원 등
- 공공 보건 조치에 대한 690억 달러 지원, 구체적으로 코로나 19 테스트와 확진자 추적을 위한 220억 달러, BARDA에 대한 200억 달러,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주 정부에 백신 배포를 위한 90억 달러 지원 등

이와 같은 미국의 과감한 예산정책은 트럼프 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되었다. 지난 수십 년간 신자유주의에 따른 작은 정부를 지향해온 미국 정부의 예산정책이 코로나 19 확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정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였다.

5) 5차 재정지원 정책

미국은 2020년 3월 이후 총 4차례의 재정지원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새로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도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경기 부양 안을 제시하였다. 연방준비제도 또한 일관된 통화 완화 정책에도 경기회복의 한계를 확인함에 따라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3월 11일, 1조 9,000억 달러 규모(GDP의 약 8.8%)의 경기 부양 법안(American Rescue Plan Act)에 서명했다. 법안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는 등 논쟁적인 사안이 포함되어, 단순 과반수를 이용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원 절차인 예산조정을 이용한 법안 통과가 가능했다.

이 대규모 재정지원 법안은 코로나 19 백신이 대다수 국민에게 보급될 때까지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즉 가족, 지역 사회, 기업에 시한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국민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급, 주당 300달러의 연방 실업급여 추가지급을 9월 말까지 연장, 예방접종 프로그램 지원, 학교 재개를 위한 기금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총 자금 중 약 3,500억 달러가 주(州) 정부와 지방정부에 할당되었다. 통과된 계획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 연간 소득이 75,000달러 미만인 개인이나 피부양자에 대해 최대 1,400달러의 직접 현금 지급, 75,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지급액이 감소하며, 연간 소득이 10만 달러인 개인들의 경우 완전히 중단
- 연간 최대 아동 세액 공제를 6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 1인당 3,000달러, 6세 이하의 아동 1인당 3,600달러로 인상
- 2021년 9월까지 주당 300달러의 연방 실업급여 추가지급
- K-12 학교를 위한 1,300억 달러의 자금 지원.
- 코로나 19 백신 관리 및 배포, 코로나 19 감염 진단 및 추적, 코로나 19 테스트 및 개인 보호 장비 구입을 위해 질병통제예방센터에 555억 달러 지원
- 390억 달러의 고등교육 자금 지원
- 300억 달러의 대중교통 자금 지원.
- 250억 달러의 긴급 임대 지원
- 레스토랑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250억 달러 배정
- 400억 달러의 육아 기금, 구체적으로 150억 달러의 보육 지원 및 250억 달러의 보육 제공자 지원
- 항공산업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150억 달러 지원
- 학자금 대출을 면제해 주는 조항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통과

이상의 대규모 재정지원 정책 이외에도, 바이든 대통령 당선 후 다음과 같은 행정 조치가 시행되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 조치

- 학자금 대출 연장

우선 교육부는 2021년 1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연방 보유 학자금 대출을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대출 연장은 2022년 8

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또한, American Rescue Plan이 통과된 직후인 2021년 3월 30일,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지원에 2021년 9월 30일까지의 채무 불이행 사채도 포함하도록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 퇴거조치 유예

CARES 법은 2020년 7월 24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퇴거 조치에 대한 유예를 시행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유예 기간이 연장되었고, 2021년 6월 24일 정부는 2021년 7월 31일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2021년 8월 3일,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 19가 급격히 확산하는 카운티에서 퇴거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2021년 10월 3일에 만료되도록 설정되었다. 하지만, 2021년 8월 26일, 미국 대법원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명령을 철회했고, 사실상 퇴거 조치 유예가 종료되었다.

미국의 GDP 대비 코로나 19 대응 지출 규모는 19.2%로 G20 국가 중 6위를 차지하였지만, 실제로 코로나 19에 대응해 지출한 금액은 총 4조 달러 이상으로 세계 최대 규모이다(2021년 1월 기준). 이러한 순위 차이는 미국의 GDP 규모가 여타 국가들보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파악된다.

3. 통화정책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더불어 기준금리 인하, 시중 유동성 공급, 금융시장 안정화, 각종 대출 지원 등의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 해왔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기간 중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이를 제로금리 수준에서 동결하였다. 또한, 코로나 19로 경색된 자본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회사채를 매입하고 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를 늘리는 등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 해왔다. 특히 미국은 다른 주요 선진국 들과 다르게 기업 대출 외에도 가계 대출 확대 또한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경기부양책은 금융완화 정책, 금융시장 지원, 은행 대출 지원, 기업 지원, 가계 및 소비자 지원, 지방정부 차입 지원 등 여섯 가지 기본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1) 금융완화 정책

중앙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전통적인 확장적 통화정책인 금융완화 정책은 크게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정책으로 나뉘볼 수 있다. 이러한 금융완화 정책은 여러 경로를 통해 실물시장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코로나 19 팬데믹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왔다.

□ 기준금리 인하

연방준비제도는 코로나 19의 본격적인 확산 이전인 2020년 3월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는데, 먼저 0.50%포인트를 인하한 뒤 1.00%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하여 제로금리 정책을 시행했다. 즉 이는 범위로 표현되는 기준금리가 1.50%~1.75%에서 0.00%~0.25%로 인하되어 본격적인 제로금리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한다.

연방준비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이후 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증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전격적인 금리 인하 조치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급격한 금리 인하 정책은 3월 중순 예정되어 있던 정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역시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러한 사태가 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준금리는 다른 단기금리의 기준이 되고 장기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의 이러한 기준금리 인하조치는 가계와 기업의 대출비용을 낮추어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키고자 시행된 것이다.

또한, 연방준비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며 축적된 대처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기준금리의 경로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시장에 발표했다. 이는 완화된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방향을 시장에 공표한 것으로서, 코로나 19 사태로 증대된 시장의 불확실성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정책 초기에, 연방준비제도는 경제가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최대 고용수준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금리를 0%에 가깝게 유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후 2020년 9월, 연방준비제도는 새로운 통화정책 틀을 반영하여 노동시장 상황이 최대 고용수준에 도달하고 인플레이션율이 2%를 약간 초과하는 궤도에 오를 때까지 금리는 낮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하며 지침을 강화했다.

2021년 말에는 인플레이션이 연방준비제도의 2% 목표치를 크게 웃돌았고 노동시장은 연준의 최대 고용 목표에 근접하고 있었다.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결정 위원회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2021년 12월 회의에서 대부분 위원이 2022년 3차례의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2022년 3월 미국 내 물가상승률은 지난 40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예상되었다. 이러한 높은 물가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3월부터 연방준비제도는 대유행이 시작된 이래 최저 수준을 유지하던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했다.

3월에는 0.25%포인트를 인상하는 베이비스텝을 시작으로, 5월에는 0.50%포인트를 인상하는 빅스텝, 6월에는 0.75%포인트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까지 단행했다. 또한, 7월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도 0.75%포인트 인상이 유력시되는 상황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2022년 1월 0.25%였던 기준금리를 2.5%까지 인상하는 데 6개월밖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의 속도가 중요한데, 지금의 기준금리 인상속도를 보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침체를 감내하고서라도 인플레이션을 반드시 잡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다수의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가 내년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즉, 연방준비제도가 현재 진행 중인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급격한 금리 인상 정책이 결국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트리게 되면서 통화정책의 기초를 변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위와 같은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은 시중 금리에 영향을 미쳐, 자금의 차입비용을 증가시키고 민간의 소비감소, 기업의 투자 감소, 자산가격 하락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경기침체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양적 완화 정책

양적 완화 정책인 자산매입 정책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국채와 주택담보대출증권(MBS)과 같은 자산을 직접 매입하는 것이다. 연방준비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020년 3월 15일 이 정책을 다시 시작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미국 국채 및 주택담보대출증권 시장의 급격한 경색에 대응하여, 연준의 자산매입 조치는 당초 이들 시장에 대한 원활한 기능 회복을 목표로 했다. 이들 시장은 일종의 기준점 및 유동성 공급원으로서 신용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상에서 언급한 듯이 2020년 3월 15일, 연준은 양적 완화 정책의 목표를 경제 지원으로 전환했다. 연방준비제도는 “향후 몇 달 동안 적어도 5,000억 달러의 미국 국채와 2,000억 달러의 정부 보증 주택담보대출증권을 매입할 것” 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3월 23일 연방준비제도는 “광범위한 금융 조건에 대한 원활한 시장 기능과 효과적인 통화정책 전달을 위해 ‘필요한’ 양만큼 증권을 매입할 것” 이라고 발표하면서, 채권 매입의 명시적인 목적을 경

기 부양으로 확장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의 자산매입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매달 최소 800억 달러의 국고채와 400억 달러의 주택 및 상업용 주택담보대출증권을 매입할 것이라고 설정했다. 또한, 2020년 12월에 이 지침을 업데이트하여 경제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연방준비제도의 목표를 향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면 이러한 구매 속도를 늦출 것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1월 연방준비제도는 자산매입 속도를 매달 국채는 100억 달러, 주택담보대출증권은 50억 달러씩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이사회의 의장은 2021년 12월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와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응하기 위하여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연방준비제도는 테이퍼링 속도를 두 배로 높여 매달 국채는 200억 달러, 주택담보대출증권은 100억 달러씩 자산매입 규모를 줄여나갔다.

2) 금융시장 지원

코로나 19 확산으로 민간의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가 커짐에 따라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등 각종 금융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모든 경제주체가 경기침체라는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금융시장에 참가하기 시작하자, 자산가격의 급격한 변동과 신용경색 등 평소에는 볼 수 없던 이상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더 나아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는 이하의 내용과 같은 각종 금융시장 지원정책을 실행했다.

□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연방준비제도는 2020년 3월 17일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활한 프로그램인 PDCF (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를 통해 재할인창구를 기존의 예금은행 외에도 Primary Dealer로 알려진 24개 대형 금융기관까지 확대하고 최장 90일까지 저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재도입을 위해 연방준비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방준비제도법 13조 3항에 따른 긴급 대출 권한을 발동하기 위한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Primary Dealer들은 연방준비제도에 상업어음과 지방채 등 각종 증권을 담보로 제공했다. 연방준비제도의 목표는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경색된 신용 시장에서 이러한 Primary Dealer들이 계속 신용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코로나 19 확산 초기,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관과 개인은 위험 자산을 매각하고 현금을 비축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딜러들은 그동안 축적된 유가증권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 머니마켓 뮤추얼펀드 시장 지원

또한, 연방준비제도는 금융위기 당시 시행하였던 머니마켓 뮤추얼펀드 유동성 지원기구(Money Market Mutual Fund Liquidity Facility, MMLF)를 재출범시켰다. 연방준비제도는 “머니마켓 펀드가 가계 및 기타 투자자들의 상황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지원하기 위해” MMLF를 설립했고 밝혔다.

이 기구의 설립목적은 국채, 미국정부 보증업체증권(GSE),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무담보 기업어음을 담보로 금융회사에 대출을 제

공하는 것이었다. 코로나 19가 시작되자 펀드 투자자들은 프라임 머니마켓 펀드에서 대거 빠져나갔고, 이러한 유출에 맞추기 위해 펀드들은 그들의 유가증권을 팔려고 시도했지만, 시장의 혼란으로 인해 고품질의 단기증권조차도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당시에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만 담보로 인정했던 것과는 달리 담보 인정 대상을 기업어음 이외에도 회사채, 지방채까지 확대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 기구는 이와 같은 머니마켓 뮤추얼펀드가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연방준비제도법 제 13조 3항에 근거하여 재무부로부터 프로그램 운영 허가를 얻어 외환안정기금으로부터 100억 달러를 지원받아 잠재적 손실을 메웠다. MMLF의 운영은 2021년 3월 31일에 만료되었다.

□ 환매조건부채권 운영범위 확대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는 환매조건부채권(RP) 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해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환매 시장은 기업들이 현금과 증권을 단기, 대개 하룻밤 사이에 빌리고 빌려주는 곳이다. 환매조건부 채권시장의 혼란은 기준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연방준비제도는 주요 거래자들이 재무부 또는 기타 정부 보증 증권을 거래할 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 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 연방준비제도는 부정적 시장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00억 달러의 overnight 환매를, 200억 달러의 two-week 환매 시행했다. 그 이후 연방준비제도는 팬데믹 기간 동안 환매조건부채권 운용 규모 및 대출 기간을 확장했다.

이 외에도 2021년 7월, 연방준비제도는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상설기구인 Standing Repo Facility를 설립하였다.

□ FIMA Repo Facility 신설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자 안전자산으로서 달러를 원하는 외국인들의 미국 국채 매도세가 금융시장에 부담을 가져왔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국채를 팔지 않고도 달러 편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연방준비제도는 2021년 7월 연방준비제도와 스와프 라인을 구축하지 않은 상당수의 외국 중앙은행에 달러 편딩을 제공하는 FIMA (Foreign and International Monetary Authorities)라는 새로운 Repo Facility를 설립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이들 중앙은행에 달러화를 대출해준다. 그러면 이를 받은 각국 중앙은행들은 국내 금융기관에 달러를 빌려줄 수 있게 된다. 즉 외국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 담보 환매 거래를 통해 달러를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통화 스와프 계약 확대

코로나 19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자 안전자산으로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의 수요 증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달러화 품귀현상이 발생하는 등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러한 전세계적 달러화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는 외국 중앙은행과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확대했다.

연방준비제도는 외국 중앙은행에 미국 달러를 공급해 글로벌 달러 자금 시장의 유동성을 개선했다. 외국 중앙은행은 이렇게 수취한 유동성을 통해 달러 자금 조달이 필요한 자국 은행을 지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거래의 대가로 연방준비제도는 외화를 받았고 해당 거래에 이자를 부과했다.

스위스, 영국, 유로존, 일본, 캐나다 등 연방준비제도와 영구 스와프 라인이 있는 5개 중앙은행의 경우, 연방준비제도는 거래 금리를 내리고 스와프 만기를 연장했다. 그 외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멕시코, 브라질, 스웨덴, 싱가포르, 한국, 호주의 중앙은행에 임시 스와프 라인을 제공했다. 2021년 6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 임시 스와프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3) 은행 대출 지원

□ 은행에 대한 직접 대출

연방준비제도는 할인창구에서 은행의 대출에 부과하는 금리인 할인을 2.25%에서 0.25%로 2%포인트 낮췄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대출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이는 전날 밤에 대출이 완료되고 다음 날 아침에 상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는 이 기간을 90일로 연장했다.

할인창구에서 은행들은 현금을 대가로 연방준비제도에 다양한 담보(증권, 대출 등)를 제공하기 때문에 연준은 이러한 대출에 거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은행이 이렇게 확보한 단기 유동성으로 은행의 예금자들은 계속해서 돈을 찾을 수 있고 은행들은 새로운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은행들은 그들이 할인창구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시장에 새어나가면, 시장참여자들이 은행의 재정 상황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생각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대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시중의 8개 대형 은행은 2020년 3월에 할인창구

에서 함께 돈을 빌리기로 합의했다.

□ 일시적 규제 완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개혁들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은행들의 파산 위험성과 그로 인한 구제금융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은행들에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추가 자본금을 보유할 것을 요구했다. 그와 동시에 이러한 조치들은 경기침체에 은행의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그들의 추가 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들을 포함했다.

연방준비제도는 손실 흡수 능력(Total Loss Absorbing Capacity, TLAC)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은행들의 대출 여력을 확대했다. 즉 연방준비제도는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대형 은행과 지역 은행 모두 신규대출 규모를 늘릴 수 있게 하려고 부실에 대비하여 쌓아놓은 추가 자본금을 대출에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는 것이다.

또한, 연방준비제도는 은행의 지급 준비금 요건을 없앴다. 지급 준비금이란 예금자들의 급작스러운 예금 인출 사태에 은행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한 자금이다.

이외에도 연방준비제도는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내내 은행 지주회사의 배당금 지급과 주식 환매를 제한했지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2021년 6월 30일부터 대부분의 은행에 대해 이러한 제한을 해제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더 침체에 빠지더라도 은행들이 대출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4) 기업 지원

□ 대규모 고용 기업에 대한 직접 대출

2020년 3월 23일 연방준비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없었던 기업에 대한 신용 흐름을 지원하기 위한 두 가지 새로운 회사채시장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기존의 프로그램은 주로 금융시장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새롭게 도입된 프로그램인 프라이머리 마켓 기업 신용 기구(Prim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 PMCCF)와 세컨더리 마켓 기업 신용 기구(Secondary Market Corporate Credit Facility, SMCCF)는 연방준비제도가 기업 자금 조달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다.

프라이머리 마켓 기업 신용 기구는 연방준비제도가 신규 채권 발행과 대출 제공을 통해 기업에 직접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을 받은 기업은 직원과 자금 공급자에게 지급할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처음 6개월 동안 이자와 원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주식을 다시 살 수는 없었다.

그리고 새로운 세컨더리 마켓 기업 신용 기구에 따라 연방준비제도는 투자 등급의 회사채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뿐만 아니라 기존 회사채도 매입할 수도 있었다. 잘 조직된 세컨더리 마켓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새로운 신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러한 기구들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혼란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라고 발표했다. 2020년 4월 9일, 연방준비제도는 이 기구들에 1,000억 달러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면서, 총 7,500억 달러의 기업 부채를 지원하기 위해 기구들이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전의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연방준비제도는 연방준비제도법 제13조 3항에 근거하여 미국 재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는데, 미 재무부는 이 승인을 통해 외환안정기금으로부터 750억 달러를 지원하여 잠재적 손실을 메울 수 있었다.

이후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이 진행 중이던 2020년 말, 연방준비제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Steven Mnuchin 재무장관은 최종 채권과 대출 매입이 늦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지도록 결정했다. 연방준비제도는 금융 상황이 다시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다 확실한 보장이 있을 때까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해당 결정에 반대했다.

연방준비제도는 2021년 6월 2일 137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포트폴리오를 단계적으로 매각하겠다고 밝혔고, 2021년 12월 이를 완료했다.

□ 기업어음 매입기구

기업어음 시장은 기업들이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무담보 단기 채무를 발행하는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다.

연방준비제도는 기업어음 매입기구(Co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 CPFF)를 통해 기업어음을 사들였고, 기본적으로 콜금리보다 1~2%포인트 높은 금리로 기업에 3개월까지 직접 대출을 해주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러한 기업어음 매입정책을 통해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 유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른 비은행 대출 기구와 마찬가지로 연방준비제도는 연방준비제도법 제13조 3항에 따라 미국 재무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100억 달러를 기업어음 매입기구에 투입해 손실을 메울 수 있었다. 기

업어음 매입기구는 2021년 3월 31일에 폐지되었다.

□ 중소기업 대출 지원

2020년 4월 9일 연방준비제도는 메인 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Main Street Business Lending Program, MSBLP)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청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받기에는 규모가 크고 회사채시장 지원 프로그램을 받기에는 규모가 작은 기업을 위한 것으로서, 이후 대상 기업이 점차 확장되었다.

연방준비제도는 신규 대출기구(New Loans Facility), 확대 대출기구(Expanded Loans Facility), 우선 대출기구(Priority Loans Facility) 등 3개 기구를 통해 5년 만기 대출로 최대 6,000억 달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또한, 직원 수가 최대 15,000명 또는 연간 매출액이 최대 50억 달러인 기업도 참여할 수 있었다. 연방준비제도는 2020년 6월 신규 대출과 우선 대출의 최소대출 규모를 낮춤과 동시에 모든 기구에 대한 최대대출 규모를 늘리고 상환 기간을 연장했다.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연방준비제도는 연방준비제도법 제13조 3항에 근거해 미국 재무부의 허가를 받았는데, CARES법을 통해 3개의 메인 스트리트 프로그램에 750억 달러를 투입해 손실을 메웠다.

Steven Mnuchin 재무장관은 메인 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이 2021년 1월 8일까지 최종 대출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2020년 12월 14일에 대출 신청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는 2020년 4월 9일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급여보호프로그램 유동성기구(Paycheck Protection Program Liquidity Facility, PPPLF)를 신설했다.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은행은 급여보호프로그램 대출을 담보로 해당 기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 비영리단체 대출 지원

2020년 7월, 연방준비제도는 메인 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을 병원, 학교, 사회봉사단체 등 팬데믹 이전에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했던 비영리단체로까지 확대했다.

대출자격은 최소 10명의 직원과 30억 달러 이하의 기부금이었다. 대출 만기는 5년이었지만, 원금 납부는 처음 2년간 유예되었다. 기업에 대한 대출과 마찬가지로 자금 공급자는 대출금의 5%를 보유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1년 1월 8일 메인 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과 함께 중단되었다.

5) 가계 및 소비자 지원

□ 자산유동화증권 시장 지원기구

연방준비제도는 2020년 3월 23일 재설립된 자산유동화증권 시장 지원기구(Term Asset-Backed Securities Loan Facility, TALF)를 통해, 신규대출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증권 보유자에게 대출을 지급함으로써 가계, 소비자,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이 대출에는 학자금 대출,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대출, 그리고 중소기업청이 보증하는 대출이 포함되었다.

연방준비제도는 적격 담보물의 범위를 기존 상업용 주택담보대출 증권뿐만 아니라 최고 품질의 신규 발행 담보대출 채무까지 확대하였다. 연방준비제도는 기업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자산유동화증권 시장 지원기구가 1,000억 달러까지 신규 신용대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연방준비제도는 연방준비제도법 제13조 3항에 따라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 외환안정기금(Exchange Stabilization Fund)으로부터 100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 재원을 조달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0년 12월 31일 Steven Mnuchin 재무장관의 명령에 따라 중단되었다.

6) 지방정부 차입 지원

□ 지방정부에 대한 직접 대출

연방준비제도는 2020년 4월 9일 설립된 지방정부 유동성 공급기구(Municipal Liquidity Facility, MLF)를 통해 지방정부에 직접 대출을 해주었다. 이후 연방준비제도는 2020년 4월 27일과 6월 3일 적격 대출자 범위를 확대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2020년 3월 지방채 시장은 신용경색 상태에 빠졌고, 지방정부는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이에 지방정부 유동성 공급기구는 주(州) 정부, 최소 50만 명이 거주하는 카운티, 최소 25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에 대출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준비제도는 투자적격 신용등급을 가진 지방정부가 만기 3년 미만인 어음을 통해 총 5,000억 달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6월, 일리노이주는 최초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지방정부가 되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는 인구 기준에 미달한 시·군이 있는 주의 주지사들에게 최대 2개 지역까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지사는 또한 두 개의 수익채권 발행자(공항, 요금소, 공공요금소, 대중교통)를 적격자로 지정할 수도 있었다. 뉴욕시 교통국은 8월에 이 조항을 이용하여 지방정부 유동성 공급기구에서 4억 5,000만 달러를 빌렸다.

연방준비제도는 연방준비제도법 제13조 3항에 따라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잠재적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350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2020년 12월 31일 이후 지방정부 유동성 공급기구는 Steven Mnuchin 재무장관의 결정에 따라 재무부 지원이 끊기면서 중단되었다.

Ⅲ. 한국의 정책 대응 및 시사점

한국은 2020년 1월 첫 국내 코로나 19 감염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국내외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동년 2월부터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첫 코로나 19 국내 감염사례가 발견된 이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외입국자 검역 강화, 높은 시민의식 수준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등으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안정적으로 코로나 19 감염자 수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국내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에 따른 몇 차례의 대유행을 겪으며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 수는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과는 별도로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재정, 통화정책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겠다.

1.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 금융정책

한국은 코로나 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1분기 이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경기침체를 겪었다. 실제로 한국은 2020년 2분기부터 실질 GDP 기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0년 -0.7%의 역(逆)성장을 보여주었다.

이는 각국의 봉쇄정책으로 인한 수출 급감과 이로 인한 제조업과 서

비즈니스의 위기, 그리고 소비 및 투자 위축에 따른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 등 경제의 전(全) 분야에 걸친 부정적 실물충격에 따른 현상이었다.

이러한 급격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총 4차례, 2021년 총 2차례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및 시행하였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하였다.

1) 재정정책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예상되자 정부는 2020년 3월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시작으로 2020년 총 8차례의 대통령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여 추경안 확정 등 대규모 재정금융 지원대책을 결정하였다. 또한, 동년 4월부터 경제 부총리 중심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 19라는 유례없는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적 비상경제 조치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였다. 각각의 비상경제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비상경제회의(3월 19일)

코로나 19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이 어렵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구체적으로 매출 감소로 현금흐름이 불안정해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의 ‘금융부담 완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증권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금융시장 안정화’ 등의 3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춘 총액 50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결정

□ 2차 비상경제회의(3월 24일)

중견기업 및 대기업까지 확대된 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과 불확실성의 증대로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려운 자금시장의 불안 심리 확산 방지를 위한 자금공급 등 총 10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결정,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보증 등 총 58조 3,000억 원의 기업자금 지원, 주식과 회사채 및 단기자금 시장에 공급되는 총 41조 8,000억 원의 유동성 지원 등

□ 3차 비상경제회의(3월 30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 등의 무급휴직자에게 최장 2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생활안정금 지원 및 특별고용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 수당 지원 등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책 결정

□ 4차 비상경제회의(4월 8일)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어려움에 부딪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36조 원 이상의 무역 금융 공급, 급격히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17조 7,000억 원 규모의 내수 보완방안 마련, 코로나 19에 따른 경영악화로 피해를 본 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12조 원 규모의 세 부담 완화 등

□ 5차 비상경제회의(4월 22일)

40조 원 규모의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 긴급 조성, 코로나 19로 현실화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 고용안정 대책에 10조 원 투입 등

□ 6차 비상경제회의(6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3차 추경안 논의, 구체적으로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의 3차 추경안 편성과 그 안에 반영된 5조 원 규모의 하반기 한국판 뉴딜 단기 사업안 마련,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구성

□ 7차 비상경제회의(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구체적으로 ICT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초격차 확대 등의 ‘디지털 뉴딜’ 과 저탄소·친환경으로 경제기반의 전환 등의 ‘그린 뉴딜’ 을 강력히 추진하고, 이로 인한 경제구조 재편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로 이를 뒷받침

□ 8차 비상경제회의(9월 10일)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 확정, 코로나 19 경기침체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된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안 발표

2020년 정부는 실물 피해대책 마련, 금융안정 및 고용안정 유지, 경기침체 완화 등을 위해 총 4차례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또한, 총 310조 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대책을 통해 코로나 19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을 지원했다.

방역상황이 장기화하여 2021년에도 피해가 누적되고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을 위한 1차 추경안 및 누적된 코로나 19 피해의 복구를 위해 ‘코로나 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를 포함한 2차 추경안을 마련했다. 각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1차 추경(3월 17일 국회통과)

코로나 19 파급영향 최소화 및 조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 코로나 19 사태의 방역과 피해극복 및 민생안정과 관련해 필요한 사업 중 시급성, 집행가능성, 한시성이라는 3가지 원칙에 부합하도록 추경안 편성, 총 11조 7,000억 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 통과

□ 2020년 2차 추경(4월 30일 국회통과)

소득 하위 70% 이하인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 원의 한시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one-point 추경안, 별도의 국채발행 없이 전액 지출구조조정 및 기금 재원을 통해 추경안 재원 마련,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全) 국민으로 확대되어 정부안보다 4.6조 원이 증액된 총 12조 2,000억 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 통과

□ 2020년 3차 추경(7월 4일 국회통과)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과 상인들이 매출 급감으로 인한 경영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고용 급감 등 노동시장의 부정적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 2020년 하반기 내수·수출 등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재정지원을 위한 총 35조 3,000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 정부안에서 약 2,000억 원이 감액된 35조 1,000억 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 통과

□ 2020년 4차 추경(9월 22일 국회통과)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추경안, 1961년 이후 처음으로 한해 총 4차례나 추경안이 편성되었고, 이 추경안은 코로나 19 경기침체로 피해

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된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의 성격, 총 7조 8,000억 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 통과

□ 2021년 1차 추경(3월 25일 국회통과)

코로나 19 사태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위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재원 마련 추경안, 총 14조 9,000억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 통과

□ 2021년 2차 추경(7월 24일 국회통과)

코로나 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백신·방역 보강,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총 33조 원 규모의 추경안, 추가 세수 등을 통해 별도의 적자 국채발행 없이 추경안 재원 마련, 정부안보다 1조 9,000억 원 증가한 총 34조 9,000억 원 규모로 국회 통과

2) 통화정책

코로나 19의 확산 초기, 세계 경제는 팬데믹으로 인해 크게 위축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의 가격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또한, 당시에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소비 및 투자의 감소로 인한 수요 감소로 인플레이션율도 낮게 유지되었다. 이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시행하여 거시경제의 침체 위험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코로나 19 확산 이후 경제 및 금융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은 다음과 같다.

□ 기준금리 인하

금융통화위원회는 2020년 3월과 5월 각각 기준금리를 0.50%포인트와 0.25%포인트씩 하향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기존 1.25%에

서 0.50%로 0.75%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러한 완화된 통화정책은 코로나 19로 촉발된 금융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안정시켜 금융시장이 실물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영향을 줄여나가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후 금융통화위원회는 2021년 경기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국내외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두 차례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기존 0.50%에서 1.00%로 0.50%포인트 상승하였다. 비록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경제의 성장세 지속과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상회함에 따라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하는 것이었다.

2022년 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국제유가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이에 따라 공업제품 등의 가격도 지속 상승하였다. 또한, 미(美)연방준비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가속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성도 증대되었다.

이에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세 차례, 0.50%포인트씩 한 차례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불과 6개월 만에 기존 1.00%에서 2.25%로 1.25%포인트 상승하게 되었다. 비록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가 증대되었지만, 높은 물가 상승세가 가속하고 있으므로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억제하여 고물가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및 계약 연장

코로나 19 전염병의 확산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자 안전자산으로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외환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급격한 달러 자금시장의 경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美)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양자 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은행은 이렇게 확보된 달러 유동성을 활용하여 경쟁입찰방식의 외화대출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통화 스와프 계약에 따른 달러화 공급으로 외화자금시장의 상황이 개선되는 등 외환시장 안정화에 이바지하였다.

□ 원화 유동성 공급 확대

금융통화위원회는 2020년 3월 26일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한국은행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매주 1회 정례 RP 매입 창구를 열어 일정 금리 수준 아래에서 ‘무제한’으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이러한 제한 없는 유동성 공급을 위해 RP 매매 대상기관을 기존 22곳(은행 17개, 비은행 5개)에서 33곳(은행 17개, 비은행 16개)으로 확대하고, 대상 증권에 공공기관 발행채권과 은행채를 추가하였다.

이렇게 무제한의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 19로 인한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경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금리 인하 등의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미(美)연방준비제도도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유동성 경색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 3월 국채와 MBS 무제한 매입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한국식 양적 완화 정책인 ‘전액 공급방식의 RP 매입 제도’는 2020년 7월까지 1차례 연장 시행되어 총 19조 4,300억 원의 자금을 시중에 공급하였다. 이는 시중 단기 유동성 위축 해소에 도움을 주었고, 정부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의 늘어나는 조달 부담을 일부 해소해 주었다.

이외에도 한국은행은 2020년 3월 중 단기자금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

를 위해 총 3조 5,000억 원 규모의 증권금융 및 증권사 환매채를 매입하였다. 또한, 코로나 19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가운데, 향후 국고채 발행 규모 증대를 예상하여 이에 따른 채권수급불균형과 시장금리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국고채 단순매입을 확대해 시행하였다.

□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금융통화위원회는 2020년 4월 16일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제도는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경색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 제도를 통해 한국은행은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채를 담보로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금융기관인 증권사 및 보험사에도 최장 6개월 이내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인 증권사와 보험사에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것은 해당 제도가 처음으로, 언제든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로 운용했다는 점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제도적 노력을 파악할 수 있다.

애초 10조 원 한도 내에서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던 해당 제도는, 2020년 말 코로나 19가 재확산함에 따라 경기 상황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3개월씩 두 차례 연장되었다. 하지만 2021년 들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이하에서 살펴볼 회사채·CP 매입기구 등이 운영되고 있어 추가 유동성 공급 수단의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금융안정 특별대출제도’는 2021년 2월에 종료되었다.

□ 회사채·CP 매입기구에 대한 대출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그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자 한국은행은 여러 가지 금융시장 안정책을 시행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량채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되었지만, 비우량채 시장의 경우 제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여전히 유동성 경색 문제가 존재했다. 즉, 저신용 기업의 경우 자금을 조달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는 실물경제 부진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직접 대출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정부, 산업은행과 함께 특수목적기구인 ‘회사채·CP 매입기구’를 공동 설립하였다. 해당 기구는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및 CP를 매입하는 10조의 규모의 유한회사로서, 한국은행은 전체 10조 원 가운데 80%를 선순위 대출로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는 미(美)연방준비제도가 재무부 출자를 바탕으로 직접 대출에 나선 제도를 한국에 도입한 것으로서, 한국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성을 일정 부분 부담하면서 회사채와 CP를 매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한국은행은 해당 기구를 통해 각각 1조 7,800억 원 규모로 두 차례에 걸쳐 총 3조 5,600억 원을 대출하여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은행은 금융중개 지원 대출 한도 증액 및 금리 인하, 공개시장운영 대상 증권 및 대상기관 확대,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2. 한국의 코로나 19 대응 정책 특징

세계 각국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확장적 재정, 통화정책을 사용해 왔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실업률이 증가하며 각종 금융시장에서 가격 변동성과 신용경색 현상이 발생하는 등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 역시 각종 현금성 지원금 지급, 고용안정 정책, 금융지원 정책, 민생지원책 등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기준금리 인하, 시중 유동성 공급, 특별대출제도 마련, 금융시장 규제 완화 등의 완화된 통화정책을 사용해 왔다.

이렇듯 전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 정부 및 통화 당국의 조치들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이라는 큰 틀에서는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각국의 제도, 통화주권, 재정 여력 등과 산업구조, 방역 조치, 코로나 19 피해 수준 등의 차이로 인해 각 정책의 세부적인 모습들을 서로 차이를 보였다.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 19 대응 금융정책을 서로 비교해보면, 통화정책의 경우 유사한 정책 방향성을 갖는다. 물론 미국은 달러화라는 기축통화를 보유한 나라로써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과는 통화정책 결정 환경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대응 통화정책의 경우, 금리인하, 시중 유동성 공급, 기존에 없던 특별대출 도입 등 통화정책의 방향성과 제도 등은 유사한 면을 갖는다. 무제한 RP 매입, SPV를 통한 특별대출제도 시행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정책의 경우, 정책 규모 및 그 구성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데 큰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재정정책의 측면에서 한국은 GDP 대비 낮은 코로나 19 대응 재정지출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이 또한 현금 지급 등의 직접지원보다는 대출이나 유동성 공급 등의 금융지원에 집중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Database of Country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을 보면 한국의 GDP 대비 추가 재정지출¹⁾ 비율은 2021년 8월 기준 6.4%로 집계되었다. 이는 G20 국가 중 선진국 10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평균인 14.6%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재정지출 비율이 높은 미국(25.5%), 영국(19.3%) 외에도, 한국과 GDP 규모가 비슷한 호주(18.4%), 캐나다(15.9%), 이탈리아(10.9)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총 6차례 대규모 추경안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직접지원의 절대적 규모 및 GDP 대비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미국은 직접지원의 GDP 대비 비율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았고, 미국의 압도적인 GDP 규모를 고려할 때 절대적인 규모 측면에서도 막대한 수준의 재정지출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추가 재정지출’ 방식보다 미래의 상환을 염두에 둔 간접 지원 방식인 대출 및 보증 등의 ‘유동성 지원’ 방식의 지원 규모가 크다. 한국의 GDP 대비 유동성 지원 비율은 2021년 8월 기준 10.1%로서 6.4%인 추가 재정지출 방식보다 높다. 미국(2.4%), 호주(1.8%), 캐나다(4.0%) 등의 영미권 국가에서는 추가 재정지출 비율이 유동성 지원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지만, 한국(10.1%), 일본(28.3%), 유럽 국가들은 유동성 비율이 높다. 이는 미국 등 국가의 낮은 고용 안정성 및 공공의료지출비율 수준을 고려한 정책적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1) 정부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기존에 배정한 예산 이외에 추가로 사용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중소기업인·취약계층 지원 등의 직접적인 지원

3. 향후 과제

한국 정부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2021년까지 총 6차례, 약 116조 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안을 편성하여 집행해왔다. 이러한 지속적인 확장 재정정책으로 인해 정부 부채 비율은 코로나 19 이전보다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GDP 대비 일반정부 기준 총부채비율은 50%를, 순부채 비율은 20%를 넘어섰고 향후 몇 년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기업들의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추경안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경기회복 국면에 접어든 지금 미래 재정 수요에 대비한 재정 여력의 회복을 위해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케인즈식의 논리는, 현재 그 효과성에 대해 많은 찬반 논란이 있다. 그러나 위기 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침체 극복의 효과성은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확대될 재정 규모를 고려할 때,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확장적 재정의 시대인 지금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 외에도 최근 급격히 치솟고 있는 인플레이션율을 잡기 위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정책이 회복세에 접어든 경기 상황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Alexander Klemm, Shafik Hebous, Geerten Michielse, Narine Nersesyan, 「COVID-19 Recovery Contributions」, 2021.04.
- Budget Office Misistry of Economy and Finance, 「Recovery for All: Korea’ s Fiscal Response to COVID-19」, 2021.10.
- Eric Milstein, David Wessel, 「What did the Fed do in response to the COVID-19 crisis?」, 2021.12.
- Fazeer Rahim, Richard Allen, Hélène Barroy, Laura Gores, Joseph Kutzin, 「COVID-19 Funds in Response to the Pandemic」, 2020.08.
- Gabe Alpert, Charles Potters, Kirsten Rohrs Schmitt, 「U.S. Government COVID-19 Economic Stimulus and Relief」, 2022.04.
- IMF, 「Fiscal Monitor: Database of Country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2021.10.
- IMF, 「Policy Tracker: Economic Responses to COVID-19 by 196 Countries」, 2021.07.
- James McBride, Anshu Siripurapu 「What is the U.S. Federal Reserve?」, 2022.01.
- Nicolás Cachanosky, Bryan P. Cutsinger, Thomas L. Hogan, William J. Luther,corresponding, Alexander W. Salter, 「The Federal Reserve’s response to the COVID-19 contraction: An initial appraisal」, 2021.03.
- Richard H. Clarida, Burcu Duygan-Bump, Chiara Scotti, 「The COVID-19 Crisis and the Federal Reserve’ s Policy Response」, 2021.06.
- Teresa Curristine, Laura Doherty, Bruno Imbert, Fazeer Sheik Rahim, Vincent Tang, Claude Wendling, 「Budgeting in a Crisis: Guidance for Preparing the 2021 Budget」, 2020.06.
- United Nations, 「The monetary policy response to COVID-19: the role of asset purchase programmes」, 2022.02.

- 강구상 외,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0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코로나19 경제대책」 및 관련 기사, 2021.07.
- 심혜정 외,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조세지원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20.04.
- 윤영교, 「미국 바이든 재정정책의 이론적 배경과 현황」, KDB미래전략연구소, 2021.04.
- 윤영교,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과 경제 상황」, KDB미래전략연구소, 2022.02.
- 윤영교, 「최근 미국 통화 및 재정정책 동향」, KDB미래전략연구소, 2021.02.
- 윤은기 외,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2021.12.
- 이은영, 「유럽연합(EU)의 코로나19 대응정책 동향」, KDB미래전략연구소, 2020.05.
- 정다연, 「2020년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지출 추이 비교」, 나라살림브리핑, 2021.02.
- 한국은행,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금융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대응」 및 관련 보도자료, 2021.12.
-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보도자료, 2020.04., 2021.08., 2022.07.